

한 명이 수백장 원서 제출... 지방선거 1년 앞 민주당 러시

전남 기초단체장 입지자들, 앞다퉈 지지세력에 당원 가입 독려

현직 시장·군수측도 가세...민주 소속 단체장 아닌 고흥·장흥 등 중심 확산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 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수십~수백명의 입당원서가 담긴 서류 봉지를 도당에 제출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향후 민주당 공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기초단체장 입지자 층이 앞다퉈 지지세력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5일 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민주당 입당 원서를 전남도당에 제출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당에 제출되는 입당 원서가 증가세를 보이던 새해 들어선 눈에 띄게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정치권 인사는 “근래 들어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명부터 수백명의 입당원서가 담긴 서류 봉지를 가져와 도당에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입당 절차는 통상 당 홈페이지를 통한 입당 원서 제출, 팩스 및 우편, 인편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입당 원서가 담긴 서류 봉지를 전남도당으로 가져와 제출

하는 사례도 수시로 있다”며 “이는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지어 바라보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3월 초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치러질 차기 당표 선거와 연관짓는 해석도 일부 있지만, 쇄도하는 입당 원서의 8할은 차기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차기 시장·군수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지지세력 입당을 독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차기 지방선거 경선 룰 확정 이전이지만, ‘권리당원 50%, 일반 주민 50%’라는 기존 경선 룰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 아래 권리당원 확보 경쟁에 입지

자들이 앞다퉈 나섰다

민주당은 통상 입당 원서가 접수되면 당원명부에 등록하는 동시에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당 축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신규 당원에게 입당 사실을 안내하고, 당비는 입당 다음 달부터 결제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거일 6개월 전 기준, 6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실적’을 보유한 권리당원에게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러한 당원 가입 움직임이 오는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3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출몰 제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 당원 확보 경쟁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면서도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거나, 3선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이 여럿 있는 데다 현 단체장의 재·삼선 의지나 당선 가능성이 열리는 지역이 적지 않아 입지자들 움직임이 예년보다 빨리 뜨거워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고흥과 장흥, 3선 단체장 배출로 다음 선거에서 무주공산이 된 담양과 진도의 경우 다수의 입지자들이 물밑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리에 연루됐거나 성과 부족으로 지역 지지기가 떨어진 기초단체와 함께 3선 도전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자가 벌써 두 자릿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민주당 중재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식에서 이낙연 당 대표와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넓고 두텁게”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

민주, 소상공인 기준 완화 거론...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연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식에 이어 규모를 놓고 당정이 제차 갈등을 노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달아오른 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

이낙연 대표 임기 다음달 종료...홍영표, 광주·전남 방문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이낙연 당 대표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될 셈이다.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당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이 설 명절이 끝난 이날 여론의 뒷받침을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

이날 오후 1시께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지사를 만난 홍 의원은 잇따라 광주시청을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시장과 시의원들과의 면담은 홍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또 각 지역위원회를 돌며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의원은 당 대표 출마에 앞

서 지역을 순회하며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에 이어 당 대표에 출마하는 우원식 의원도 조만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지난 주에는 전남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고흥이 고향인 송영길 의원도 광주와 전남을 수시로 찾아 뒷받침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제25조는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도부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는 4·7 재보선 이후 5월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 송영길(5선·인천 계양구)·우원식(4선·서울 노원구)·홍영표(4선·인천 부평구) 의원의 경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당권 경쟁 예열

홍문표·윤영석, 물밑 기반 다지기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일부 중진들이 이미 4·7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차기 당권 주자로 홍문표·윤영석 의원을 꼽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히고 각종 당원조직 행사, 개별 식사회등을 기회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4·7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두 사람은 공개적인 의사표명은 삼가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미 여러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이상 중진급에서 권영세·서병수·조경태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의 세력화 움직임도 관련 포인트다. 특히 옛 비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김부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두고 ‘김메이커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 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등은 혁신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

이 인력양성과 R&D가 섞여 있어도 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OECD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예산의 25~50% 범위만 R&D 사업으로 사용해도 혁신법 대상이 된다.

이용빈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이나 성과 관리 등을 측정하던 기준을 인문사회분야에 적용하면서 인문학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학술 발전에도 많은 장애를 야기했다”면서 “관리의 효율성보다 학문의 자율성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